개인정보보호위원회 **보도자료**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2026.7.16.(목) 업무보고 종료시 배포 2026.7.15.(수) 11:00

AI 혁신을 뒷받침하고 국민 권익을 증진하는 예방중심 개인정보 보호 실현

- 개인정보보호위원회, 「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」 보고
- 예방체계 확산, AX 혁신 안전활용, 국민체감 권익 증진, 신속한 조사 및 실효적 제재 등 4대 역점과제 추진
- AI 시대 개인정보 규제개혁과 5극 3특 데이터 안전활용, 청년인재·기업 양성, 국가정상화 등 정부 역점사업도 적극 추진

개인정보보호위원회(위원장 송경희, 이하 '개인정보위')는 7월 16일(목) 10시, 청와대 영빈관에서 **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**하였다.

< 행사 개요 >

- **일시/장소** : '26.7.16.(목) 10:00~12:00 / 청와대 영빈관
- **참석 기관** : 개인정보보호위원회,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, 우주항공청 등 16개 기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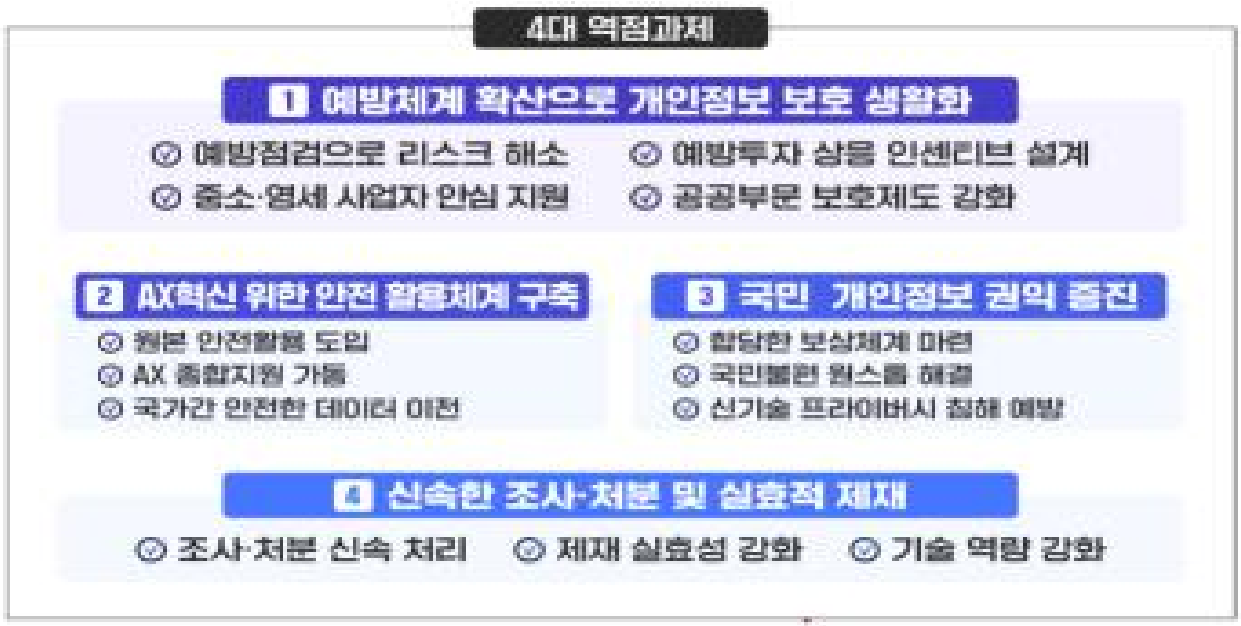
개인정보위는 작년 12월 "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" 발표 이후, **징벌적 과징금***을 **속도감 있게 도입**('26.3.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개정)하고, 쿠팡·명품3사 등 **대규모 유출사고**에 대해서는 **엄정하게 처분**하였다.

* (기존) 매출액의 최대 3% → (개선) 중대·반복 위반 시 **매출액의 최대 10%**

또한, 과거 사후대응식 대처를 벗어나 **사전·상시적 보호체계를 구축**하기 위해 「**예방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**」을 발표('26.5.)하였다. 이에 따라, 상조회사, 금융 등 민간 고위험 분야를 대상으로 **사전실태점검**을 하는 한편, 2,300여개 공공부문이 **자체 점검**하도록 관리·지원하고 있다. 이와 함께, 정보보호 및 **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**(ISMS-P) **제도**도 **전면개편** 하였다.

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**기반도 조성**하였다. **가명처리 절차를 효율화**하여 실제로 **처리기간을 단축**(기존 126일→ 30일 이내)하였고, 전문기관이 가명처리 전반을 지원하는 **'가명처리 원스톱 지원체계'도 도입**('26.5.~)하였다. 신기술·신서비스 개발 과정의 개인정보 규제 불확실성을 컨설팅하는 **사전적정성 검토제**와 **비조치의견서** 등 **혁신지원 제도들도 운영**하여, AI 에이전트 서비스 출시 및 의료연구 활성화도 지원하였다.

그럼에도 최근 AI 해킹 등으로 **개인정보 침해위협이 상존**하는 한편, 사회 전방위적 AX로 인해 **데이터 활용 수요는 폭증**하고 있다. 이러한 복합적 정책 여건에 대응하여 개인정보위는 ①예방체계 확산으로 개인정보 보호 생활화, ② AX 혁신을 위한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체계 구축, ③국민이 체감하는 개인정보 권익 증진, ④신속한 조사·처분 및 실효적 제재라는 **4대 역점과제**를 추진한다.



개혁	· AI시대 규율 전환 · 사망자 정보 규제 합리화 · 마이데이터 통한 편익 증진
지방	· 데이터 안전활용 인프라 확산 · 지방 청년 인재양성, 청년 스타트업 지원
정상화	· 유출신고의 역설 해소 · 증거 은닉·폐기 제재 · 불법유통 탐지·대응 강화
기타현안	· 국민 생활 밀접 주요 조사 · AX 기반 업무 효율화

역점과제 1 예방체계 확산으로 개인정보 보호 생활화

예방점검으로 리스크 해소 징벌적 과징금 등 제재 강화로 인해 유출사고 발생 시 **기업·기관의 부담**이 커졌을 뿐만 아니라, 침해위협이 상시화되어 **개인정보 리스크도 높아진 상황**이다. 그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국민생활 밀접분야와 유출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대상으로 **정기·수시 실태점검 체계를 시행**한다.

각 부처는 본부 뿐만 아니라, 개인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소속·산하 기관의 보호실태까지 점검하도록 **책임성이 부여**된다. **개인정보위**는 전담 조직(공공실태점검단)을 통해 **공공부문 점검**을 **지속적**으로 **관리·지원**한다. 특히, 주요 공공 시스템(387개 집중관리시스템) 중 자체점검 결과가 미흡한 시스템과 **주민등록번호 5천만 건 이상을 보유한 대민시스템** 등에 대해서는 **집중적으로 관리**할 방침이다.

예방투자 상응 인센티브 설계 AI 해킹기술의 발전으로, 사전예방을 기본으로 한 신속한 사고대응과 피해구제, 안전한 보호체계로의 회복까지 全주기에 걸친 보호노력이 필수가 되었다.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정책 환경 변화를 **과징금 산정 체계에 반영하여 시행**한다.

먼저 우수한 보안 시스템을 구비하고 전문성 높은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(CPO)를 지정하는 등 **법상 의무를 뛰어넘는 예방 투자**에 대해서는 **과징금을 감경**한다. 더불어 신속한 탐지·신고와 같은 사고대응과 피해확산 방지,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 **보다 안전한 보호체계로의 복원 노력**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.

<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전주기별 대응 노력에 상응한 과징금 감경 체계(예시) >

사전예방 투자		사고 대응		신속 회복
• 보안투자 비율·지속성 우수 • CPO 전문성 등 관리 우수 • 취약점 신고·조치·공개 등	➡	• 사고 대응 체계 구축 • 이상징후 신속 탐지 • 신속 신고·통지 등	➡	• 백업 복구, 시스템 개선 • 추가 피해 확산 방지 등 •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

또한, **개인정보 영향평가***를 민간에서도 활발히 시행하도록 기준·방법을 재설계하고, 다양한 업종별 평가·심사에 **개인정보 보호 활동 지표**를 연계** 하여 보호 실천이 내재화되도록 할 방침이다.

* 주요 시스템 도입·개편 시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, 개선방안 도출 등

** (사례) 문체부 관광호텔업 등급평가 가점항목에 투숙객 개인정보 보호 반영 (7.1. 시행)

중소·영세 안심 지원 개인정보 보호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한 **중소·영세 기업**에 대해서는 **처벌보다 지원**을 통해 **실질적 보호수준을 제고**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. 중소·영세기업의 **경미한 사건**은 시정을 전제로 처분을 면제하는 **처분성 경고제**를 도입하고, 사고 발생 시 빠르게 기술지원도 한다. 보호체계 **자가점검 도구를 개발**하여 중소·영세기업에 우선 배포하고, 개인정보위가 **현장**에 직접 나가 **안전성 수준도 진단, 컨설팅**할 계획이다.

공공부문 보호제도 강화 **공공기관**은 국민의 대규모·민감정보를 보유, 관리함에도, 최근 **유출사고가 지속**됨에 따라 **보다 강화된 관리체계**를 적용할 필요가 크다.

주요 공공 시스템(387개 집중관리시스템)에 대해 **의무사항을 확대***하고, 기관별 개인정보 보호 **인력·예산****도 확충**하며, **처우개선**과 **책임성 강화**도 병행한다.

* 주요 공공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대상 의무 확대 사항

제 도	현 행		개 선
전문 CPO 지정·신고	신고의무 無		개인정보 보호 경력 등 자격요건 갖춘 **전문CPO 신고 의무화**('26.9.)
취약점 점검, 모의해킹	시행 권장	➡	**연 1회 이상 실시 의무화**('27.1.~)
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(ISMS-P)	자율 인증		정부24, 국민신문고 등 주요 시스템(81개)부터 **단계적 의무화**('27.7.~)

** 취약점 점검, 접속기록 관리,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 도입 등 안전조치 예산

역점과제 2 AX 혁신을 위한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체계 구축

원본 안전활용 도입 AI 학습에 **원본데이터를 활용**하여 보다 높은 성능의 AI를 개발하고자 하는 현장 수요가 꾸준히 제기되었다. 개인정보위는 **공익·사회적 목적**의 **AI 기술 개발** 시 **맞춤형 안전조치**를 전제로 **개인정보 활용을 허용**하는 **「AI 원본활용 특례*」** 도입을 추진한다. 또한, '에이전틱 AI', '공공 AX' 등 **분야별 안내서**를 발간하여 현장의 안전한 데이터 처리와 AI 활용을 지원한다.

*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개정안 국회 정무위원회 의결('26.5.14.)

AX 종합지원 가동 개인정보위는 사전적정성 검토, 비조치의견서, 적극 법령해석, 규제 샌드박스 등 **다양한 혁신지원 제도들을 통합**하여 **「**가칭**AX 안심지원체계」**를 구축한다. 사안별로 **최적 수단 매칭**으로 규제 **불확실성을 해소**하고, **공공·민간 AX가 적법하고 안전**하게 이루어지도록 보다 **효과적으로 지원**한다.

국가간 안전한 데이터 이전 **국가 간 데이터 이동이 활발**해짐에 따라 국민 개인정보가 **안전하게 이전**될 수 있도록 **이전수단도 확대**한다. 현행법 상 동의·동등성 인정 등의 방법 외에도 개인정보위가 마련한 **표준계약서**(SCC), 개인정보위의 승인을 받은 **기업 내부 규정**(BCR)을 통해 **안전한 국외이전**이 가능하도록 한다. 또한, **산업계 수요**를 바탕으로 아태지역 등 교류 필요성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**전략적 협력**을 추진한다.

역점과제 3 국민이 체감하는 개인정보 권익 증진

합당한 보상체계 마련 개인정보 유출 피해 당사자인 국민에 대한 **실질적 보상이 부족**하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도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. 유출 발생 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원칙을 명시하고, 기업이 유출책임에 대한 전반적인 입증을 하도록 **법정 손해배상제도**를 **강화**한다. 또한, 징수된 **과징금 수입** 등이 국민의 **피해 회복과 권리 구제**에 쓰일 수 있도록 **통합기금**을 마련할 계획이다.

국민불편 원스톱 해결 **국민의 권리행사**를 보다 **효과적으로 지원**하기 위해 AI 기반의 **「개인정보 침해 종합지원 서비스」** 구축을 추진한다. 상담과 신고, 피해구제, 회원 탈퇴지원, 개인정보 탐지·삭제 서비스 등을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할 계획이다.

신기술 프라이버시 침해 예방 신기술이 일상에 접목되며 예측하지 못한 침해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. 국민 일상생활 주요 앱을 대상으로 **다크패턴** 현황과 침해요인을 분석하고, **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(PET) 연구개발**을 통해 새로운 프라이버시 위협도 예측, 대비한다. 특히, **실증과 상용화**를 목표로 한 개인정보 보호 기술을 개발하여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.

역점과제 4 신속한 조사·처분 및 실효적 제재

조사·처분 신속 처리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**인식 제고**와 함께 **유출사고에 대한 신고도 증가***되고 있다. 개인정보위는 100만건 이상 유출 등 **중요 사건**을 중심으로 전담 조사단(TF)을 구성하여 **집중 조사·처분**하고, **소규모 사건**에 대해서는 **신속 처리절차도 도입**할 계획이다.

* **유출신고 건수** : ('24) 307 → ('25) 447 → **('26.上) 432**('25년 연간 신고건수 수준 근접)

제재 실효성 강화 9월부터 중대·반복 위반 시 **매출액의 최대 10%**를 부과하는 **징벌적 과징금이 시행**된다. **엄정하고 공정한 과징금 부과**를 위해 관련 시행령 및 고시 등 **제재 체계 전반을 정비**할 계획이다. 이와 함께 조사 비협조에 대한 **이행강제금** 및 **증거보전명령**, 위반 확정 전 침해중지 등을 명할 수 있는 **긴급 보호조치 명령** 등 **조사력 강화 제도를 마련**하여 **제재의 실효성**을 높인다.

기술 역량 강화 나날이 고도화되는 신규 위협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**과학적 조사체계**를 마련한다. 랜섬웨어 등 복잡한 증거의 수집·분석이 가능토록 개인정보위 **디지털 포렌식 센터의 기능을 고도화**한다. 연내 **기술분석센터도 구축**하여 전문 역량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.

개인정보위는 4대 역점과제와 더불어 **하반기 국가적 중점사안**인 개혁과제, 지방주도 성장 과제, 국가정상화 과제도 **적극 추진**한다.

개혁 과제

먼저, **AI 시대 환경**을 반영하여 **위험에 비례**하도록 개인정보 **규율체계를 전환**한다.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인정보 **적법처리 근거**를 확대*하고,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**스마트 글라스** 등에 대해 현실 데이터 환경을 반영한 **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원칙**도 수립한다.

* **<예시>** (**현행**) 민간 '공익' 목적 데이터 활용 제약 ⇒ (**개선**) 공익 목적(범죄대응, 재난방지 등) 활용
(**현행**) 사고 CCTV 열람 등 정당한 사유에도 데이터 처리 불가 ⇒ (**개선**) 제3자 정당한 이익 근거

재난 등 특수한 상황의 **사망자 개인정보 처리 기준**을 담은 안내서를 발간하고, 생전 의사표시에 따라 유족이 사망자 계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**사망자와 제3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균형 방안**을 마련한다.

※ 현행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상 살아있는 개인의 정보만 개인정보로 규정하므로, 사망자 정보는 법 적용 불확실성 존재

마이데이터 제도를 통해 국민이 편리하고 주체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**국민체감 혁신 서비스*도 출시**한다. 또한, 마이데이터 제도와 연계하여 개인정보 활용 수익의 일정 부분을 소유자(국민)에게 환원하는 **'이익공유' 방안을 구상**하고, 돌봄·응급이송 등 **사회난제 해결에 시범적용**할 계획이다.

* **< 국민체감 혁신 서비스(예시) >**
- **(의료)** 병원 진료·검사내역 파편화 ⇒ 진료내역 활용을 통한 **비대면 진료 고도화, 맞춤형 식단** 서비스
- **(통신)** 통신요금의 과다여부 확인 애로 ⇒ 실제 이용패턴을 기반으로 **맞춤형 요금제** 추천
- **(에너지)** 청년·주부·고령자 등은 금융이력 부족 ⇒ 공과금 납부 이력을 활용한 **대안 신용평가**

지방주도 성장 과제

개인정보 활용 제도를 혁신하여 **5극 3특 균형성장 전략**, **3대 메가프로젝트** 등과 같은 국가 역점사업을 지원한다.

가명정보를 다양한 연구에 **재사용**할 수 있도록 **지역에서부터 시범사업**을 실시한 후 단계적으로 제도화한다. 또한, **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**의 가명처리 서비스 대상을 확대*하고, 각 지역 센터에 가명정보 **결합기능도 새롭게 부여**한다. 더불어 **거점별 이노베이션 존**들을 클라우드로 **연계**하여 **지역적 한계를 극복**하는 **개인정보 분석·활용**이 가능토록 적극 지원한다.

* 텍스트 뿐만 아니라 영상·음성·이미지 등 비정형 데이터까지 가명처리 인프라 확보

구 분	기 능	개수	지 역
활용 지원센터	가명 처리·활용 지원	7개	서울·인천·원주·대전·전주·대구·부산
결합 전문기관	가명정보 간 결합 수행	18개	서울·경기·강원·대전·전북·대구·경북·전남
이노베이션 존	유연한 개인정보 활용	8개	서울·경기·춘천·대전·광주·대구·김천

청년인재를 대상으로 **지역 현장**에서 역할 가능한 **데이터 프라이버시 전문가**도 양성한다. 지방소재 대학 등의 IT 전공 청년들에게 개인정보 법령·기술을 집중 교육한 후, 보호 컨설팅 활동과 연계하여 **일 경험을 제공**할 예정이다. 지역의 청년 취업난을 해결하고 개인정보 보호 기반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. 더불어, **지방 청년기업** 대상 **개인정보 법·기술 컨설팅**도 추진한다.

국가정상화 과제

개인정보 분야 정상화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. 성실하게 유출 사실을 신고한 기업이 더 큰 부담을 지는 역설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**성실 신고 및 조기 대응에는 인센티브**를 부여하고, **의도적 방치 시에는 과징금을 가중**한다.

※ 현행 미신고·지연 시 최대 3천만원 이하 과태료만 부과 가능한 반면, 유출신고를 하여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최대 매출액의 3% 과징금 부과 가능

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발생시 관련 **증거를 은닉·폐기**하는 행위에 대한 **제재를 신설**한다. 또한, 신고·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위법행위 처분에 도움이 된 자에게는 **신고포상금을 지급**하는 제도도 추진한다.

개인정보 **불법유통 탐지, 대응**을 강화하기 위해 유출된 개인정보임을 알면서도 다크웹 등에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, 형벌규정(5년 이하 징역, 5천만원 이하 벌금)도 신설한다. 개인정보위가 불법유통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탐지·삭제·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, 수사기관 등과의 협업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.

송경희 위원장은 “지난해 **대규모 유출사고**를 계기로 **제재**의 **실효성**을 높이는 한편, **예방 중심**으로 **개인정보 보호체계**를 **전환**하고 있다.”며, “하반기에는 **예방 투자**와 **보호 노력**이 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**제도적 지원**을 **강화**하고, **안전한 데이터 활용 혁신**도 **속도감** 있게 **추진**해 **국민**이 **체감**할 수 있는 **변화**와 **성과**를 만들어 내겠다.”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기획조정관 혁신기획담당관	책임자	과 장	정혜원	02-2100-2451
		담당자	사무관	김푸르나	02-2100-2453
		담당자	사무관	여성민	02-2100-3188
		담당자	주무관	강민지	02-2100-2454